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들어가는 글

성 주류화 정책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지 15년 가까이 되었다. 성 주류화 정책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의 정책 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은 여성가족부가 주도하여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00년대 초반에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통계를 시행하는 근거규정을 「여성발전기본법」에 마련했고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여성대회 이후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로 성인지 예산의 도입을 정부에 요구했고 국회에서는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성인지 예산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활발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25-27). 2000년대

후반에는 성인지 예산에 관한 규정이 「국가재정법」에 포함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할 당시에 한국은 캐나다의 성분석(GBA) 제도를 벤치마킹했으나 성인지 예산 제도가 함께 시행되면서 한국형 성 주류화 정책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에 독립된 「성별영향평가법」을 제정하면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성 주류화 정책의 주요 도구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이 상호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토대를 갖추었다.

유럽국가와 비교해서 한국은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짧은 나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한 편이다.

\* 이 글은 장은하 외(2019), 『글로벌 여성의제 국내이행 점검』, pp.165-188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UN, EU 등의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 도구를 제도화했고 중앙정부의 성 주류화 정책은 지방정부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305개의 정부기관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이 지난 15년간 빠른 속도로 성 주류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성 주류화의 핵심도구가 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제도화하는 근거법을 제·개정하면서 법적 기반을 다져왔다는 점, 여성가족부가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부서와 협력해서 성 주류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성 주류화를 지원하는 여성정책 연구기관, 젠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단체, 시민단체가 협력체계를 이루면서 성 주류화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성 주류화는 유엔이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한 이후, 회원 국가에 성평등 관점을 모든 정책에 통합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해 왔다. 성 주류화의 핵심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 관점을 공공정책에 통합함으로써 정책의 시스템과 문화를 전환하는 것이다(김양희 외, 2007:6). 그러나 이러한 성 주류화가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는 성 주류화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과 추진결과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이 추진해 온 성 주류화 정책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성 주류화 정책의 주요 도구들

성 주류화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으로 알려지고 인정받아 왔다. 다양한 성 주류화 도구들이 개발되었고(Frey, 2008: 203), 한국은 2001년에 여성부가 설치되면서 여성의 권익향상과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성 주류화의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였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을 실행하였다. 성별영향평가를 포함한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양성평등정책으로 변경되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8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성 주류화가 법률 용어로 사용된 것이다. 한국의 성 주류화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15조(성별영향평가), 제16조(성인지 예산),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8조(성인지 교육)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 성인지 예산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성인지 결산은 「국가회계법」과 「지방회계법」, 성인지 통계는 「통계법」에 제도운영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 1) 성별영향평가

한국의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제도운영의 목적을 두고 있다.<sup>1)</sup>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는 국민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정책과 법제로

〈표 1〉 '양성평등기본법'의 성 주류화 정책 근거규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li> <li>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li> </ul>
제15조(성별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li> </ul>
제16조(성인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li> <li>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li> </ul>
제17조(성인지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li> <li>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li> </ul>
제18조(성인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li> <li>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li> <li>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ul>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부터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를 부정하고 성별 차이를 고려하고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한국은 공공정책에 대한 시범 분석을 거쳐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 9개 정책에 대한 시범분석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는 53개 기관, 2006년에는 198개 기관, 2007년에는 278개 기관으로 급속히 확대되었고<sup>2)</sup> 2020년에는 305개 정부기관이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법」이 2012년에 시행되면서 분석대상은 사업으로부터

법령과 법정 기본계획으로 확대되었다.

성별영향평가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일반 성별영향평가와 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로 구분된다. 일반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는 법령과 사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절차를 보면, 대상과제 선정→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정책개선 반영계획 제출→정책개선 반영계획 관리, 성인지 예산서 작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추진절차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별영향평가 시스템

1)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p.3

2) 여성가족부(2013), 「2020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64

(<https://gia.mogef.go.kr:8443/common/main.do>)을 통해서 진행된다. 일반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여성가족부는 정부기관이 제출한 성별영향평가서와 종합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매년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여함으로써 정부기관이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sup>3)</sup>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수요조사, 일반 국민 및 NGO대상 과제발굴 공모를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대상 과제(안)를 선정한다.<sup>4)</sup> 이어서 대상과제(안)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대상정책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이어서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정책개선을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정책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개선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는 2012년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매년 4개에서 10여개 정책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했으며 분석평가 결과를 해당부처에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여부를 이행점검하고 있다.

## 2) 성인지 예산

한국의 성인지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국가 성인지 예산과 지방 정부가 수행하는 지방 성인지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단체와 여성가족부, 여성국회의원들의 협력의 결과로 제도화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을 시작하였고, 한국여성의전화는 ‘지역중심의 여성정책 예산분석 활동’을 하였으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회에 ‘성인지적 예산 정책마련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2002년에 국회 여성위원회는 ‘성인지적 예산 편성 및 자료 제출 촉구결의안’을 의결하였으며, 그 후에도 여성의원들은 성인지 예산에 관한 논의를 확산시켰다.<sup>5)</sup> 이어서 2006년에 성인지 예산 조항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이 공포되었다.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에는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고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결산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이 확인되고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국가 회계법」 제15조의 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서는 성인지 결산서와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세입세출결산 서류에 첨부되

3)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pp.91-92

4)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p.98

5) 김영희·김경희(2006), “성인지 예산·성별영향평가의 연계와 지원방안”, 「정부재정운영과 성인지 예산·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개발원·한국재정학회, 제32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pp.28-29

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회계법 시행령」 제 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에서는 성인지 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성인지 결산 및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sup>6)</sup>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별영향평가와 연계되어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환류로 연결되도록 하여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목표(지표)에서 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 성별수혜율 실적을 살펴보면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데,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에 나타난 2018년 전체 평균 여성수혜율은 54.1%로서, 전년(51.9%)보다 약간 상승하였다.<sup>7)</sup>

지방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가 국가정책의 방향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별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대상사업 선정 및 작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후,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sup>8)</sup>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작성기준과 절차가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추진절차를 보면, 회계연도가 다르고 시민사회 모니터링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에서 민관협력에 기초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별도의 예산지

원을 하는 경우가 적다. 여성가족부가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서 소액 예산으로 성인지 예산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 3) 성인지 통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성 주류화 정책이 확산되면서 성별 통계의 필요성과 정책분석을 위한 수요가 확대되었다. 「성별영향평가 지침」에서는 사업, 법정중장기 계획, 법령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성별요구도 및 성별형평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통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에서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성별 예산수혜 등을 분석하면서 성별 구분 통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각종 성별 통계의 수요가 확대되었다.<sup>9)</sup> 또한 공공정책에서의 성별 차이, 성 불평등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성인지 통계는 「양성평등기본법」과 「통계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성인지 통계 관련 내용이 「통계법」에 포함되면서 성인지 통계의 실행력과 파급력이 높아졌다.

여성가족부는 2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성인지 통계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국가승인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sup>10)</sup> 2008년에 「남녀별 통계 생산 및 활용 지침」을 발간한 이후에 2011년에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성인지 통계는 사회의 여러 측면

6) 기획재정부 ·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2019),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 매뉴얼, p.65

7) 김효주 외(2018),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p.80 참조

8)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가이드라인(2013)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작성되고 있다. 매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제공하고 있다(장윤선 외, 2019: 13).

9) 여성가족부(2018), 「2018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안내서」, p.4

10) 여성가족부(2018), 「2018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 안내서」 p.9

에서 나타나는 성별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통계로 양성평등정책의 수립과 평가에서 활용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sup>11)</sup>

#### 4) 성인지 교육

한국의 성인지 교육은 성 주류화 도구 중의 하나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담당 공무원은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정책행위자들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뿐 아니라 젠더 전문가 집단인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포함시켰다.<sup>12)</sup>

또한 성 주류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성인지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방법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다. 성인지 교육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인 것으로 성인지 교육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교육대상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양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고위직 공무원도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sup>13)</sup>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위한 성인지 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2019년 기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 99,92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직 공무원인 5급 이상 공무원이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하였고 고위직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162명이 성인지 교육을 받았다.

〈표 2〉 교육유형별, 직급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적(2019)

(단위: 명)

구분	교육 유형	직급별 교육 참가인원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실무담당
		합계	5급 이상	6급 이하 (특정직, 기타)d)		
전체	계	99,920	7,420	92,500	162	443
	위탁 교육 <sup>a)</sup>	1,749	423	1,326	41	95
	찾아가는 교육 <sup>b)</sup>	1,698	65	1,633	10	14
	자체 교육 <sup>c)</sup>	96,473	6,932	89,541	111	334

주 1: a) 위탁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워크숍 등

2: b) 찾아가는 교육은 여성가족부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희망하는 기관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한 교육

3: c) 자체교육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직장교육과 강사초빙이나 내부강사 활용, 자체 워크숍 등

4: d) 특정직에는 군, 경찰, 소방, 교육, 연구직 등 포함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p.53 참조

11) 주재선·김돌순·한진영·김근태(2017),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성인지 통계 개선 연구』, 여성가족부, p.3

12) 여성가족부 성인지사이버교육, (<https://eqgender.kigepe.or.kr/elearning/user/facultyremote/FacultyIntroView.do>) (검색일: 2019.08.20.)

13) 여성가족부 성인지사이버교육, (<https://eqgender.kigepe.or.kr/elearning/user/facultyremote/FacultyIntroView.do>) (검색일: 2019.08.20.)



### 3. 남는 과제들

한국은 성별영향평가 중심으로 성 주류화 정책을 구축하면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의 법적 기반을 다져왔지만 제도와 현실간의 격차가 존재한다. CEDAW 한국 8차 심의 최종 견해(17조)에 의하면, (a)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하고 필요한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을 배치하며 여성발전을 위한 국가기구를 총괄 조정하는 명확한 권한을 부여할 것, (b) 모든 단위의 지방정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적절한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을 배치할 것, (c) 기획재정부가 관여하는 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을 제공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의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한국의 성 주류화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 주류화 추진기구의 권한 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1) 성 주류화 추진기구의 권한 강화와 성 주류화 사무국 운영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법」을 수차례 개정하면서 정책개선 이행을 강화하려고 했지만 부처의 권한이 미약해서 다른 중앙부처가 소관하는 법령이나 사업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데 역부족이다. 현재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sup>14)</sup> 갖고 있지만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실제로 이행되고 성 주류화 정책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은 여성가족부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위원회의장이 되고 장관들이 참석하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에 관한 이행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를 총괄하는 성 주류화 사무국을 설치하고 성 주류화 이행점검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2) 성 주류화 정책 주요 도구들간의 연계강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은 성 주류화의 핵심 도구로, 여성가족부는 두 제도를 적절하게 연계하여 성 주류화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는 대상사업의 연계, 분석지표의 연계, 추진일정의 연계 등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여성가족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는 다음연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이 성인지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일정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성 주류화 정책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정책의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성평등 수준의 향상을 체감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에 기초한 성과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적으로는 국가의 성

14)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참조,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검색일: 2019.8.21.)

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표 및 지수개발이 활발하여, 정부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평등을 가져오는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성평등 지표 GID(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atabase)를 개발하였다. 이 지표는 성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성평등 관련제도, 자원에 대한 접근, 여성의 경제적 역할 부문에 관한 세부지표를 개발하였다(김태홍 외, 2009: 9).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추진결과가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지표가 활용된다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가 상호 연계되어 성 주류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2019년에 한국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했다. 각 부처는 양성평등 전담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통해 문화예술계, 직장, 학교 등 소관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총괄 근절 기능, 직무 수행과정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성 주류화 정책을 강화하며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간다는 계획이다(여성신문, 2019.4.30.). 향후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부처의 양성평등 전담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에 기초한 성 주류화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성 주류화 추진체계를 정부기관에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3) 정부기관의 성평등 목표 설정과 책무성 강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도구들은 국가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성평등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누가, 어떻게 하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정책 설계가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김경희 외, 2015: 225).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정부기관이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부처별 성평등목표를 포함시켰다(여성가족부, 2020: 163-166). 성평등 목표의 세부목표는 6가지로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이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은 정부기관별로 부처 특성을 고려해서 성평등 세부목표에 맞는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성별영향분석을 실행해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처별 성평등 목표는 정부기관의 성 주류화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성 주류화 계획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인적 재정적 지원이 늘어나야 하며, 성평등 정책의 확산을 위한 보다 많은 자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2005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성 주류화계획을 수립하여 성 주류화 관련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향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이 상호 연계될 경우 성 주류화를 통한 공공정책의 성평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시민이 참여하는 성 주류화 모니터링과 젠더 거버넌스의 확산

한국의 성 주류화는 일자리 사업, 직업훈련 사업, 창업지원 사업 등 인적 대상 사업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시설 개선, 공원 등의 공공시설물 개선 등의 시설개선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을 포함한 시설개선사업은 국민들에게 정책체감도가 높은 편이어서 지역사회에서는 여성단체, 시민단체의 관심이 높다(김경희 외, 2016: 223).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에서는 젠더거버넌스 센터 운영, 성별영향평가 포럼, 성 주류화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이 성 주류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시민이 참여하는 성 주류화정책의 운영은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정책이 왜 필요한지 공감대를 만들고 공공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장(場)을 구성하는 것이다. 국제기구가 성 주류화를 성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

략으로 채택한 이후 유럽 국가에서는 거버넌스가 성평등 결과를 확산시키는데 핵심이며 공공정책의 성평등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행위자들간의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OECD, 2017:2).

한국은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공무원과 젠더전문가, 시민사회 참여를 토대로 한 거버넌스의 실천을 확산시키고자 하였으나 시민이 참여하는 성 주류화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성별영향평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는 「성별영향평가조례」에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의 숙선 및 자조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 주류화 정책을 운영하면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거버넌스가 확산될 경우 공공정책의 성평등 향상 뿐 아니라 젠더 민주주의가 확대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 인지 관련 재정연구를 위한 TF(2006), 「성 인지 예산제도의 도입방안」, TF보고자료, 2006.3.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2019),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작성 매뉴얼, 2019.5.  
 김경화·김동순·남궁윤영·이은경·김지영(2016),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경화·남궁윤영·동계연·주경마·이은경(2015), 「성 주류화 기반 정책 평가제도의 성평등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양화·김경희(2006), “성인지 예산·성별영향평가의 연계와 지원방안”, 「정부재정운영과 성인지 예산·성별영향평가」, 한국여성개발원·한국재정학회, 제32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김효주·조선주·이택면·김영숙·박수범·장운산·권도연·김병관·김해람(2018),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시스템, [gia.mogef.go.kr:8443/common/main.do](http://gia.mogef.go.kr:8443/common/main.do)  
 여성가족부 성인지사이버교육, [eqgender.kigepe.or.kr/elearning/user/facultyremote/FacultyIntroView.do](http://eqgender.kigepe.or.kr/elearning/user/facultyremote/FacultyIntroView.do)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20), 「2019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장운산·박수범·김병관·조소영·박윤(2019),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IV):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은하·김경화·김영택·윤지소·조혜승·홍지현·김정수·박윤정·조영숙(2019), 「글로벌 여성이제 국내이행 점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김동순·한진영·김근태(2017),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성인지 통계 개선 연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kigepe.or.kr](http://www.kigepe.or.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www.kwdi.re.kr/center/gb/intro.do](http://www.kwdi.re.kr/center/gb/intro.do)